

한국 경제 대외의존성에 대한 제언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한국경제론 2차 텀페이퍼

백찬규 노동균 김소정 위레이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
 - 2-2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3. 결론
4. 참고자료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두드러지며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대두되었다. 뉴 노멀을 처음 정의한 로저 맥나마(Roger McNamee)는 금융 위기 이전의 시기가 올드 노멀(Old Normal), 즉, 자산가격 상승과 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고성장 세를 보였던 시대라면, 이제는 금융 위기 이전의 과잉을 해소하고 투기성을 띄는 과도한 투자를 조심하는 등 저성장세가 일상인 시대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 노멀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특징으로 하여 3저시대라고도 일컫는다.

뉴 노멀 기조의 확산은 한국 경제의 생산과 수출 부진을 가져온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리스크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GNI 대비 대외의존도는 84%로 여전히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결과인 금리 상승, 중국 경기 불안, 브렉시트 등 대외적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져 잠재 성장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과 수출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물량 투입으로 인한 양적 팽창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는 총요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즉,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기보다 내수 성장을 이끄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적이라는 것을 실증 분석하여 증명한 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노동 부문의 개혁을 통해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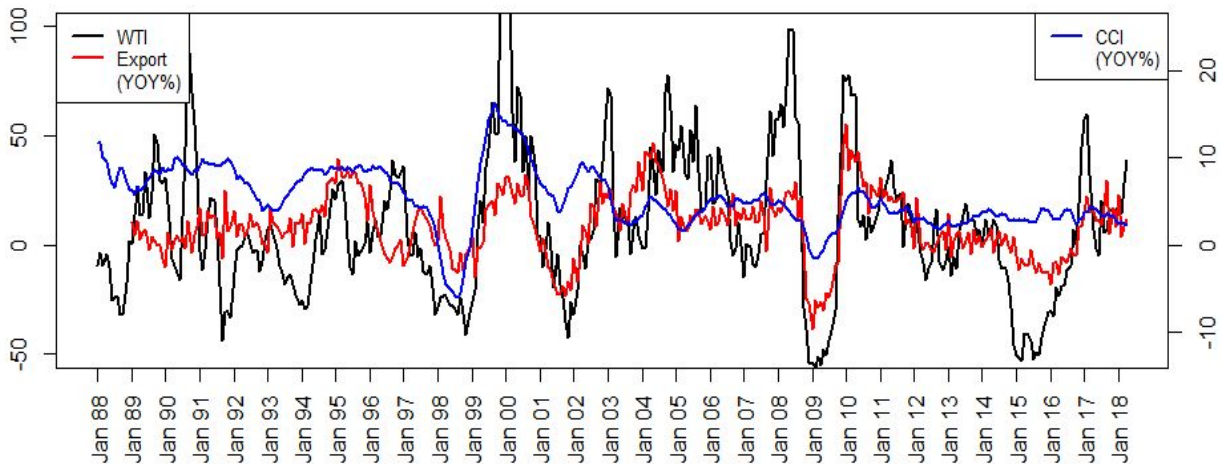
2.1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

한국경제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대외경제에 종속적이라는 점이다. 7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강력한 수출진흥책을 기반으로 성장한 경제 이기에 대외경기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떠안았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기가 둔화되어 대외의존도가 소폭 감소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성장동력을 잃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은 수출이고, 수출산업의 성패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주요국의 경제 상황에 의존적이다. 아래 그래프는 그러한 한국경제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유가, Export는 한국수출, 그리고 CCI는 경기동행지수의 증감율을 각각 의미한다. 유가와 수출은 좌측, 경기동행지수는 우측에 축을 표시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 유가와 한국경기의 높은 상관관계는 특기할 만하다. 한국과 같이 매년 원유수입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오를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가, 수출 그리고 한국경기 시계열



일핏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유가와 경기 간 상관관계의 원인은 수출이다. 유가 상승은 국제경기의 회복을 의미한다. 주요생산국의 생산량이 늘며 원유와 같은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이 늘며 동행지수가 즉각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서 보다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7] 결국 유가와 경기의 역설적 관계가 함의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철저히 대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에 전력을 가하기보다는 내수발전을 통해 대내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문의 성장률과 성장기여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있다. 특히 2016년부터 민간소비 증가는 2%대에서 머무른 상태이고 가계소득이 1%를 겨우 웃도는 상황에서 [3]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세 지속이 필요할 것이다. 내수부문의 확대는 대외경제에 종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둔화된 성장동력을 일깨울 열쇠이다.

2.2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어놓으며 실행방안으로 최저임금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장의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고, 최근 오히려 분배까지 나빠지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대표적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95로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악화된수치를 보인 바 있다. [4]

현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경직성을 강화할 뿐이며 동시에 생산성 역시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5] 더불어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도 의문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성이 낮은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하락하는 문제를 보인다.[6]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실제 업무 역량과의 괴리가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투자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제가 더해져 내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노동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문제는 실질임금과 직결되어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여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한국 내수시장 활성화의 방안을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삼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P) 2017 인적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인적자본지수는 전세계 130개국 중 27위로, 양질의 인적 자원을 보유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인적 자원을 산출한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15~24세의 고등교육 및 문제해결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불과하며, 노동 참여율이나 남녀 고용 격차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7] 2013년 PIAAC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국 성인의 문해 및 수리력과 같은 역량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인적 자원은 청소년기에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만,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이 실제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성인 노동자의 질적 수준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소위 노동시장만을 건드리는 정책을 편다면 노동자가 산출해내는 노동생산성은 늘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 위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반감만 사 더욱 경직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교육과 달리 학업과 업무 역량의 간극을 줄이는 방식의 교육을 의미한다. 그런 후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인적자본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로 인해 직무 능력에 따른 정당한 임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 결론

본론에서 유가와 경기 상관관계의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높은 대외 의존성을 보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출에만 의존한 성장을 지양하고 내수와의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 자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수치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그 요인들을 파헤쳐 보았을 때 질적으로 우수하다 단언하기 힘들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인적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부문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정책을 펼치기 전에 그 본질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이러한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수출의존적 성장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우선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개인의 구매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부문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재적소에 맞게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인적자본의 효율적 투자와 유연한 활용은 고용, 분배, 소비 그리고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불어 내수시장을 키워 대외의존성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적 균형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1] 파이낸셜 뉴스, 2017, “‘외풍에 취약’...韓경제 대외의존도 OECD 중간 수준.”

[2] 김선재, 2017, “뉴 노멀 시대하 한국의 인적자본이 영구적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7]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18.1.9 국제상품가격 WTI(현물)

8.4.1 수출금액지수

16.1.4 경기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

- 세 변수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89년 1월 부터 18년 4월까지 월단위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상술했다면 WTI는 배럴당 wti 가격(달러), Export는 한국수출총액, CCI는 경기동행지수이다.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YOY%)을 이용해 계절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스케일을 통일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WTI, Export, CCI 자료 모두가 정상 시계열로 드러났으며 Granger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차가 1인 상황(order=1)에 WTI -> Export -> CCI에 이르는 일종의 path를 도출해낼 수 있다.

```
> grangertest(Export_yoy_omitted~WTI_yoy_89,order=1) # significant WTI -> Export
Granger causality test

Model 1: Export_yoy_omitted ~ Lags(Export_yoy_omitted, 1:1) + Lags(WTI_yoy_89, 1:1)
Model 2: Export_yoy_omitted ~ Lags(Export_yoy_omitted, 1:1)
      Res.Df Df      F      Pr(>F)
1         348
2         349 -1 14.702 0.0001494 ***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 grangertest(CCI_yoy_89~Export_yoy_omitted,order=1) # significant Export -> CCI
Granger causality test

Model 1: CCI_yoy_89 ~ Lags(CCI_yoy_89, 1:1) + Lags(Export_yoy_omitted, 1:1)
Model 2: CCI_yoy_89 ~ Lags(CCI_yoy_89, 1:1)
      Res.Df Df      F      Pr(>F)
1         348
2         349 -1 4.2323 0.04041 *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

[3] 한국산업연구원, 2017, “2018년 경제, 산업 전망.”

[4] 중앙일보, 2018.05.24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 더 악화? 1분기 소득불평등 더 심해졌다”

[5] 동아닷컴, “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한겨레, “정부 핀셋중세, 소득주도 성장 정공법 아니다.”

[6]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2013.

[7] The Global Human Capital Report, 2017, WEP.

[8]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2016, 이종화.